

장준하의 정치평론 연구(2): 장준하의 정치평론에 나타난 민주주의

김대영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이 논문은 장준하의 정치평론에 관한 연구로서 2002년 발표된 「장준하의 정치평론 연구 (1): 장준하의 정치평론에 나타난 민족주의」의 후속 연구이다. 장준하(1918~1975)는 정치인이자 정치평론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치인인 동시에 정치평론가로서 성공하기 어렵다. 월짜가 강조하는 ‘비판적 거리두기’ 때문이건 아니면 리프만이 강조하는 ‘공인과 사인의 차이’ 때문이건 정치인과 정치평론가 사이에는 분명 쉽게 넘나들 수 없는 거리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준하는 정치인인 동시에 정치평론가의 삶을 살았다. 필자는 장준하의 민주주의를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찾고자 한다.

장준하의 정치평론을 통해 그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정치사상과 정치적 삶을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는 장준하로부터 ‘한민족의 민주주의’, ‘세계 속의 민주주의’, ‘이분법의 민주주의’의 의미를 도출하여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고찰한다. 나아가 장준하의 민주주의를 리프만과 비교함으로써 그의 정치평론이 갖는 특성을 권위주의 시대를 반영한 정치평론의 방법론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I. 서론: 정치인과 정치평론가

인간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다. 정치인은 세력을 형성해서 자신의 견해를 현실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고, 학자는 교육과 저술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며, 정치평론가는 현실정치를 평론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실천한다.¹⁾ 그렇지만 한 개인이 동시에 중복된 방식으로

정치적 실천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장준하(1918~1975)는 여기에서 예외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는 정치인이자 정치평론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때로는 정치인으로서, 때론 학자로서, 때로는 유권자로서, 또 때로는 정치평론가로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두 가지 역할을 하기로 쉽지 않다.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다중역할의 혼란 때문이 아니라 정치현상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의 범위 안에서 생활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정치에 접근하는 자기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오래된 습관을 바꾸기 어렵듯이 정치적 실천의 방식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

컴퓨터의 다중처리(multiprocessing)가 이미 일반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인은 다중역할(multirole)을 무리 없이 소화하면서 살고 있다. 집안에서의 역할과 직장 내에서의 역할을 무리 없이 잘 소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래관계 속에서 필요한 다중역할을 슬기롭게 수행하고 있다. 고객에게 친절하고 판매자에 대해 엄격하며, 세무당국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세자로서, 은행에 대해서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경제인으로서 처신한다. 이와 같은 다중역할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굳이 소화시켜 내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실천의 방식은 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정치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일이므로 정치적 실천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치적 실천은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다대다(多對多)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다중역할이 쉽지 않다. 다대다의 관계가 흡스가 말한 바와 같이 반드시 '만인에 대한 만

1) 이동수(2001, 88) 교수는 정치적 인간을 '정치행동가(political actor)'와 '정치사상가(political thinker)'와 '정치평론가(political critic)'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정치평론가를 "현실정치에 대해 일상의 수준에서 말하고 대화하며 비판하면서 '말'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그런데 이교수는 이와 같은 분류가 현실 속의 구체적 행위자들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 세 가지 분류는 서로 어느 정도 상호중복적이며 한 개인이 세 가지 역할을 함께 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세 가지 분류는 정치적 인간의 종류(kind)라기보다는 차원(dimension)이다."

인의 투쟁(all against all)'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통합과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과정에서 정치적 대립과 경쟁, 갈등과 투쟁은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개인이 정치적으로 다중역할을 할 경우 자칫 이습 우화에 나오는 박쥐처럼 못 믿을 사람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정치평론가 사이에는 쉽게 넘나들 수 없는 거리가 있다. 우선 정치평론가가 제대로 현실정치를 평론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거리두기(critical distance)'를 필요로 한다는 월쩌(Michael Walzer)의 주장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평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판정신의 날이 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월쩌(1987, 36)에 따르면 "우리가 국가와 우리자신을 더욱더 가깝게 동일시하면 할수록 우리는 국가의 오류에 대해 지각하고 인정하기 더 어려워진다." 현실정치에 깊이 매몰되어 있는 정치인에게 비판정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웰(George Orwell)도 월쩌와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정치평론의 생명력이 권력정치에 대한 비판에 있다고 강조한다. 오웰에 따르면, 권력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무관심하면서 타인의 고통 위에 수립된 현재의 질서를 옹호하기 위해 조직적 거짓말을 유포함으로써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권력정치에 대한 오웰의 비판은 단지 현재의 질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현재의 질서를 거부하는 진보주의자들에게도 해당된다. 권력정치는 쉽게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이 때문에 오웰(1977, 363)은 "권력 정치 안에서는 법도 없고 따라서 범죄도 없는데, 도대체 무솔리니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라고 말한다. 권력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인식 속에서 오웰은 정치평론을 통한 권력정치에 대한 비판, 나아가 정치평론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주장한다.²⁾

정치인과 정치평론가 사이의 넘나들 수 없는 간극을 '공인과 사인의 차이'로 설명하는 리프만(Walter Lippmann)의 견해도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리프만은 정치인과 정치평론가 모두가 정치활동의 주체임을 인정한다. 나아가 그는 양자 모두에게 국가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리프만은 정

2) 오웰(1977, 363)은 권력정치 속에서 진실이 설 자리를 잃고 거짓이 판치는 속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법은 사라지고, 다만 권력만이 남는다"고 말한다.

치인과 정치평론가가 책임지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역설한다. 그에게 있어서 공적 결정을 책임지는 정치인과 공론을 책임지는 정치평론가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공적인 법과 제도에 입각해서 선출되거나 임명된 정치인의 공적 결정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리프만은 미국의 제도를 공공성의 실현체로 간주한다. 제도를 통해 미국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지고 있으며, 제도를 통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공동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치인의 결정은 그것 자체로서 존중되어야만 한다.

리프만에게 있어서 정치평론가의 역할은 정치인의 결정을 위한 보조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평론가는 정치인의 결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인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만 한다. 자신을 포함하는 정치평론가들이 할 일을 “[공적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Lippmann 1965g, 100)고 말했다.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라는 것이다.³⁾

‘비판적 거리두기’ 때문이건 ‘공인과 사인의 차이’ 이건 그 어느 이유에서건 정치인과 정치평론가 사이에는 분명 쉽게 넘나들 수 없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준하는 정치인인 동시에 정치평론가의 삶을 살았다. 필자는 장준하의 민주주의를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찾고자 한다. 장준하의 민주주의를 ‘한민족의 민주주의’, ‘세계 속의 민주주의’, ‘이분법의 민주주의’로 접근하면서 장준하가 정치인인 동시에 정치평론가로서 국민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장준하의 민주주의를 통해 그의 정치평론이 갖는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정치평론가 리프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3) 리프만의 ‘손을 들어준다’는 말을 무조건적인 찬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찬반의 진지한 논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현실정치의 실정을 충분히 알리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이후에 정치인들 간에 대립되고 있는 특정 입장에 대해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 이 말의 본래 의미이다. ‘손을 들어준다’는 리프만의 말은 오늘날 한국의 정치평론가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마치 자신의 주장을 제3의 새로운 정치적 입장처럼 제시하면서 정치인들을 일괄적으로 비난하는 몇몇 한국의 정치평론가들은 올바른 공론의 형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정치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II. 한민족의 민주주의

필자는 2002년 『한국정치연구』에서 장준하의 정치평론에 나타난 그의 민족주의를 고찰한 바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장준하를 ‘민족우위론자’로 규정했고, 그 이유로 “1) 그의 민족주의가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초월했다는 점, 2) 민족의 자주성이 침해받을 경우 여타의 가치를 하위적인 것으로 격하시킨 점, 3) 민족의 통일과 관련해서는 국내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김대영 2002b, 168) 등을 들었다. 이런 맥락에서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그의 민족주의와의 연관성 안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장준하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추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민족의 민주주의’라는 분명한 주체가 존재하는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그의 민주주의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치방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채택한 정치방식이며,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살아 있는 구체적인 정치방식이다. 그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피와 살을 이어받아 이 땅에 삶을 함께하는”(장준하 1985a, 152) 한민족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수천 년의 압정에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놀리울 대로 놀리워 무기력하게 된 나머지 온순한 민족”(장준하 1985b, 233)으로 알려지게 된 한민족이 1945년 해방 이후 새롭게 채택한 정치방식이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아직은 미숙하지만 점점 더 완숙해가는 변화하는 민주주의이다. 달리 말하자면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나이를 먹는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에게 해방 후 몇 년이 지났는지, 정부 수립 이후 몇 년이 지났는지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1958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10주년이 되므로 그의 민주주의에도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장준하(1985b, 232)는 “우리가 ‘민주국가’를 세웠노라고 만방에 선포한 지도 이미 십 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깊은 감회 속에서 상기하고, 1975년에는 “조국이 광복을 되찾은 지도 올해로 꼭 30년”(장준하 1985c, 31)이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한다.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장준하의 관점은 왜곡되거나 편협한 민주주의 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박정희가 독재를 정당화했던 논리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민주주의를 ‘한국적 민주주의로’

명명하고 한민족은 자기의 고유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1997, 83)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근거에는 “‘한국적인 것’은 점차 퇴화 소멸하여 가고 대신 ‘미국적인 것’, ‘서구적인 것’ 그리고 ‘일본적인 것’이 등장 하려는 데”에서 느끼는 “끝없는 분노”가 존재한다. 박정희의 관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아기”(1997, 76)이지 “만발기”(1997, 82)가 아니다. 이 때문에 박정희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질서와 혼란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매도했다.

장준하의 민주주의도 민족의 하위범주에 자리잡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장준하의 민주주의에는 그 자체로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다음과 같은 그의 말들이 이를 반증한다: “정치적 자유는 그 자체도 기본적인 것이지만 보다 큰 민족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장준하 1985d, 58). “모방에 의한 제도만으로 현대 국가를 이룩하고 현대사에 공헌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에서 더 큰 망상도 없을 것입니다. [...] 우리 민족이 지닌 역사와 문화는 우리 민족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장준하 1985e, 166).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장준하가 결코 서구 민주주의의 척도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기계적인 정치사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심각한 학문적 논쟁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그대로 정치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필자로서는, 정치현실을 한국이라는 주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보편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은지 선뜻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양자의 논리는 모두가 한국정치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주체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접근하는 논리로 강정인 교수의 관점을 들 수 있다. 그는 “서구의 민주화 과정 역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어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경험해왔다”(강정인 2002, 39)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구중심적으로 민주주의를 해석하는 무비판적 태도를 성급한 학문적 태도라고 비판한다.

이와는 반대로 최장집 교수는 보편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접근한다. 최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대표하여 대안을 조직함으로써 한편으로 대중참여의 기반을 넓히고 다

른 한편으로 정치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최장집 2003, 17)는 점을 비판한다. 이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성은 존중받아야 하는 특성이 아니라 없애버려야만 하는 민주주의의 병폐로 제기된다.

강정인 교수의 관점에서 한국정치를 바라볼 경우 역동적인 정치과정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장집 교수의 관점에서 한국정치를 바라볼 경우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병폐를 찾아 개혁의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양자 모두 역의 단점을 안고 있다. 주체적 관점의 민주주의론은 독재나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보편적 관점의 민주주의론은 현실정치를 독선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정치불신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이들 관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주체적 관점의 민주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성취될 수 없음은 동서의 사실(史實)에서 역연한 바”라고 강조하는 장준하(1985f, 184)의 논리는 강정인 교수의 논리와 흡사하다. 그런데,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주체적 관점이 강하게 드러나는 민주주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현실정치를 바라보고 해석하며, 나아가 현실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필자는 그 이유를 장준하의 민주주의가 지니는 세계적 관점과 이분법적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II. 세계 속의 민주주의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한민족의 민주주의인 동시에 세계 속의 민주주의이다. 한민족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수립한 국가의 토대가 국제연합(UN)이라는 사실을 장준하는 결코 망각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합법정부, 유엔군의 지원으로 국토를 보존하는 땅 덩어리, 유엔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의 국제적 토대였다”(장준하 1985g, 36). 장준하가 강조하는 한민족의 민주주의는 홀로 존립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 연관성 속에서 존재하듯이 그의 민주주의도 자유진영이라는 세계 안에서 발아해서 성장하는 정치이념이다. 따라서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박정희의 민주주의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의 민주주의가 자유진영의 해석에 아랑곳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전통과 근대를 오가며 현

실정치를 재단하는 자의적인 정치이념이었던 반면에,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자유진영의 범주 안에서 해석을 공유해야만 하는 세계와 긴밀히 연관된 정치이념이었다.

장준하가 박정희의 독재를 비판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다. 당시 동서 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은 곧 자유진영으로부터 고립을 의미한다. 장준하의 관점에서 자유진영으로부터의 고립은 국가의 패망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자유진영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저버릴 경우 한민족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장준하(1985h, 122)는 박정희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만약에 박 정권이 지금까지의 집권 태도로써, 계속 민권의 존중을 저버리고 새로운 체제의 독재를 연장시킨다면,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 조국은 보다 큰 시련에 뛰어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분단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내세우는 유일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이기 때문이다.”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세계 속의 민주주의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그의 민주주의는 동서 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자유진영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민주주의이다.

세계 속의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리프만의 민주주의와 공통점을 지닌다. 리프만의 민주주의도 그의 조국 미국이 처한 현실로부터 출발한다. 리프만이 태어난 1889년은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지 꼭 100년이 되던 해였다. 당시 겨우 100년의 역사를 지닌 신생국 미국은 급속한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의 결과 세계의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리프만은 미국을 어린아이로 비유한다.⁴⁾ 미숙한 미국의 민주주의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지 못한 채 유럽의 민주주의를 추종함으로써 파시즘이 유럽에서 등장하도록 방치했으며, 그 결과 미국을 포함한 전체 서구 민주주의(Western Democracy)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 리프만의 판단이다.⁵⁾

4) 리프만(1965b, 422)은 여러 정치평론을 통해 미국에 팽배해 있는 “만성적인 유아성(chronic childishness)”을 비판했고 그 해결책으로서 민주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교육 그 자체에 대한 강조라기보다는 “유아적 경향(childish disposition)”(Lippmann 1965c, 152)과 “유아적 유형(childish pattern)”(Lippmann 1965c, 153)에 대한 비판으로서 변화된 국내의 정세에 대처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경고이다.

리프만의 민주주의도 장준하의 민주주의처럼 세계와 유기적으로 연관된 민주주의이다. 장준하와 리프만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란 추상적인 이념체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로서 세계 속에서 타국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개념이다. 또, 장준하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으로서 공산주의 세력과 독재세력이 실제로 존재하듯이, 리프만에게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적대세력으로서 파시스트와 공산주의세력이 실제로 미국에 대한 위협요소로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적인 힘을 주로 국제관계에서 찾았다.

장준하와 리프만의 세계적 관점은 “초국적 세계 권력”(Negri · Hardt 2002, 31)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네그리(Antonio Negri)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네그리 이전에 이미 장준하와 리프만은 “힘 자체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권리와 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Negri · Hardt 2002, 43)을 갖춘 초국적 세계 권력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네그리와 달리 장준하와 리프만은 그 초국적 세계 권력을 객관적으로 대상화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초국적 세계 권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준하에게 있어서 세계 권력은 민족분단과 정부수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었고, 리프만에게 있어서 세계 권력은 미국과 분리하여 상상할 수 없는 미국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었다. 이 때문에 장준하의 민주주의와 리프만의 민주주의는 모두 초국적 세계 권력과의 깊은 내적 연관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장준하와 리프만은 모두 자의적으로 민주주의를 해석할 수 없었다. 그들은 실제로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리프만의 표현에 따르면 ‘서구 민주주의’)와의 연관성 속에서 자국의 민주주의를 해석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적대적인 파시스트나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민주주의의 요소를 강조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민주주의는 세계 속에서 초국적 권력이 추구하는 초국적 정당성과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국제적으로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동시에

5) 리프만(1955, 23)은 “유럽의 민주주의가 비무장 평화 위에 존립할 것을 결정했을 때, 미국의 민주주의도 비무장 평화 위에 존립할 것을 결정했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국내적으로는 독재에 반대한다. 그의 민주주의 논리체계 내에는 독재에 반대하여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을 보장할 때 비로소 공산주의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공산노예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한시라도 ‘집권층의 노예’라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는 상황의 조성”(장준하 1985, 147)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우리의 실정에는 알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박정희(1997, 231)와 대립한다. 장준하(1985c, 32)에게 있어서는 “민주주의만이 북과 대결할 수 있는 우리의 정신적 지주”이며 비민주적 질서는 필연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 힘을 약화시킨다.

리프만도 장준하와 유사한 논리를 구사한다. 그는 「독재와 민주주의(Dictatorship and Democracy)」라는 정치평론에서 민주주의의 요체를 관용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관용은 파시스트나 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한 관용이지 결코 파시스트나 공산주의의 발호까지 수용하는 관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파시스트나 공산주의의 발호를 관용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파괴될 경우 결과적으로 관용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이다. 파시스트나 공산주의자에게까지 관용할 경우 “그들은 자유를 이용해서 자유를 파괴하는 힘을 결집”(Lippmann 1965d, 57)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단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추상적 민주주의가 아니며 세계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초국적 세계 권력과 연계된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그가 수용한 민주주의는 동서 냉전의 현실적 세계질서를 담고 있는 민주주의이다. 장준하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자유진영이 내세우는 이념체제로서의 민주주의이며 공산주의 및 파시즘과는 대립하는 구체적인 민주주의이다.

이렇게 장준하의 민주주의를 해석할 경우, 장준하가 냉전과 분단의 질서에 안주했을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장준하는 초국적 세계 권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고 주장했지만, 결코 민족의 분단과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국민의 실상을 외면하지 않았다. 장준하(1985g, 40)는 분단의 가장 큰 희생자가 국민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했다: “누가 진실로 통일을 원하는가. 돈 있는 사람들인가, 권력 있는 사람들인가,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진실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통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이 땅에 백성들, 분단 때문에 생활이 파괴되었고 분단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는 민족적 양심들, 당장 살기가 힘들고 끼니가 어려운

불쌍한 절대다수의 백성들만이 통일을 하루가 여삼추(如三秋)로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분단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분단을 뛰어 넘어 통일을 지향하는 장준하의 고민이 엿보인다. 장준하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자유진영에도 분단의 책임이 있다. 자유진영은 위력적인 힘을 갖고 있고 그 힘으로 한민족을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냈다. 따라서 한민족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발전시켜야만 한다. 그렇지만 장준하는 자유진영에게도 분단의 책임이 있고 그들이 절로 통일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준하(1985g, 38)는 “통일하는 길은 조국의 분단을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길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일은 민족의 힘, 국민의 힘을 모아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한민족 자신의 절대 과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진영과 대결하여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한민족에 주어지지 않지도 않았다. 오직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킴으로써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준하의 생각이다. 따라서 장준하는 한민족의 일차적 과제로서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체제를 분할된 채로나마 남쪽의 이 영토 위에 아름답게 구현시킴이 가장 시급한 민족적 과제”(장준하 1985h, 122)로 제기된다. 이처럼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냉전의 국제질서 안에서 통일을 위해 국민의 힘을 모으고 국력을 키우는 유일한 길로 제시된다.

그런데 동서 냉전으로 야기된 분단체제를 민주적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준하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을 의심받게 된다. 투철한 민족주의자였던 장준하는 통일의 가능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도 통일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임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장준하(1985d, 58)의 정치평론은 항상 비감한 느낌을 자아내며 도덕적인 자기희생을 요구한다: “나의 사상, 주의, 또한 지위, 나의 재산, 나의 명예가 진실로 민족통일에 보탬이 되지 않는 분단체제로부터 누리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과감하게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그는 분단체제로부터 특권을 누리면서 통일을 향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방해가 되는 특권세력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을 주장하게 된다.

여기에서 장준하의 민주주의가 갖는 이분법적 논리체계가 드러난다. 그는 통일 지향적인 국민과 분단지향적인 특권계급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특권계급에

대항하여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정치이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IV. 이분법의 민주주의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세계 속의 민주주의인 동시에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민족의 열망인 통일을 저해하는 특권계급이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장준하의 현실인식이다. 분단에 의해 고통받는 국민과 분단에 의해 특권을 누리는 소수의 특권계급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또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적 국민과 통일을 거부하는 독재적 특권계급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장준하의 민주주의가 등장한다. 다시 말해서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특권계급과 국민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국민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하는 정치사상이다. 이제 민권, 민의, 법치로 대표되는 장준하의 민주주의에 나타나는 이분법의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민권을 위협하는 특권계급과 비타협적으로 대립한다. “민주주의를 다스리는 제왕이요 주권자의 양심”(장준하 1985h, 121)인 민권(民權)이 특권계급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는 현실인식 속에서 장준하는 민권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한다. 이와 동시에 특권계급은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규정된다.

민권을 유린하는 특권계급을 장준하는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특권계급은 비단 근대국가인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다. 과거 조선시대에서도 나라를 위태롭게 했던 것은 특권계급이었고,⁶⁾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도 특권계급이다. 따라서 “진실로 이들 파렴치한 무리의 행패를 없이하기 전에는 민주주의도 번영도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라 자체의 명맥이 끊어질 염려가 있다”(장준하 1985i, 210).

6) 장준하(1985i, 210)는 이렇게 말한다: “이씨왕조를 도멸(倒滅)로 이끈 자 누구였던가? 모략과 파쟁과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일삼아 사복을 채우고 자존대당(自尊妄大)와 자가도취(自家陶醉)를 일삼던 특권계급이었다.”

장준하에 따르면 민족 분단의 책임도 특권계급에게 물어야 한다. 세계사적 모순의 결과로 분단이 되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외세에 의한 민족의 양분(兩分)이란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이를 권력장악의 조건으로 이용한”(장준하 1985d, 52) 장본인들이 특권계급이다. 따라서 장준하는 특권계급을 분단을 통해 잇속을 챙기는 매국노로 규정한다. 동시에 장준하는 그들에 대해 국민을 억압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독재를 자행하는 반민주주의자로 낙인찍는다.

이 지점에서 장준하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의 사상체계로 통합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정치제도의 민주화가 요청된다. 오늘의 강압적 정치제도는 동서 양극시대의 분단의 논리를 제도적으로 완결한 것들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 내재화된 분단체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장준하 1985k, 47). 이에 따라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특권계급을 부정하고 분단을 극복하여 민권을 확립하게 만드는 역동적 주체로서 민중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그는 “여하한 정당에게도, 정권에게도 대결하여 민중과 더불어 싸우겠노라”(장준하 1985j, 267)고 천명하면서 그것이 민주주의임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도 장준하의 정치평론은 비감하다. 민권은 역사적으로 특권계급에 의해 유린당해 왔고 장준하가 목도하고 있는 정치현실에서도 여전히 민권은 유린당하고 있다. 따라서 특권계급에 대항해서 민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투쟁이 필요하다. 이에 장준하(1985m, 71)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피를 마시며’ 밖에 자라지 못하는 ‘자유라는 나무’가 아직도 이 땅에서는 충분히 자랄 만큼 피가 흘러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참자유와 민권은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에는 반드시 피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피를 지불한 그만큼으로 자유와 민권은 얻어지는 것이다.”

리프만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미국 내의 세력으로서 독점자본을 비판했지만, 그의 정치평론은 장준하처럼 비감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쾌하고 낙관적이다. 리프만은 「어떻게 자유를 상실했는가(How Liberty Is Lost)」라는 정치평론을 통해 미국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을 독점자본에서 찾았다. 따라서 그는 “정부의 권한을 사용하여 대기업이 기술적 필요 이상으로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없도록 하는”(Lippmann 1965e, 45) 독점자본의 규제를 통한 민주정치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그렇지만 리프만은 독점자본의 규제를 주장하면서도 우울해하거나 비감해 지지 않았다. 더구나 장준하가 자주 쓰는 ‘희생’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왜냐

하면 리프만(1965f, 215)은, 미국 국민 안에서 “열정에 의해 쉽게 휩쓸리지만 경험으로부터 배울 줄 알고 이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민의(民意, people' will)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민의에 의해 미국 정치가 이끌어진다라는 확신 속에서 리프만은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다.

반면에 ‘민권’과 더불어 중요한 축으로서 장준하의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민 의’는 리프만의 그것과 다르다. 장준하가 바라보는 민의는, 권력의 기초로서 작동하기보다는 권력과 대립하는 민의이며, 권력을 이끌어가는 민의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휩박당하는 민의이다. 장준하는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다」라는 정치평론을 통해 명목상 나라의 주인인 백성과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특권계급의 대립구도 속에서 현실정치를 바라본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질곡당하는 현실정치를 이렇게 묘사한다: “민주정치는 특권계급의 정치로 변화하고 이 특권계급의 정치는 또다시 독재자의 전단정치로 변모하여 민주질서의 종언을 고하게 된다”(장준하 1985n, 230)

장준하는 민의가 실현되지 않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파악했다. 권력에 의한 강압과 왜곡이 하나의 원인이라면, 단결하지 못하는 국민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장준하의 정치평론은, 민의를 강압하거나 왜곡하는 권력자를 “민주주의의 파괴 분자”(장준하 1985o, 187)로서 비판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 노예처럼 빼앗기고도 묵묵”(장준하 1985p, 199)히 굴종하는 국민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이 지점에서 장준하의 정치평론이 그의 민주주의 사상 안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알 수 있다. 장준하의 정치평론은, 민의를 억압하는 특권계급을 비판하는 동시에 굴종하는 국민을 각성시킴으로써 진정한 민의를 드러나게 하는 민주주의적 정치행위이다. 따라서 장준하의 정치평론은 민의를 자유롭게 드러내지 못하는 한국 국민의 노예적 속성에 대한 도전장이다. 이에 장준하(1985t, 87)는 이렇게 말한다: “원래 우리 민족은 노예생활은 면하여 본 일이 별로 없는 민족인 성싶다. 때로는 이족의 노예로 때로는 특권층의 노예로 거의 일관된 노예생활 속에서 신음하였으며 내 정부라고 세워진 이후 우리는 또다시 정치적인 노예가 되어 버렸던 것이니 [중략]”. 이런 조건 속에서 장준하(장준하 1985u, 100~101)의 정치평론은, 한국 국민에게 노예적 속성을 벗어던지고 “패배하는 것같이 보였으나 다시 일어나는 민중의 양식”에 따라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 즉 “양심의 소리”, “민중의 소리”를 내도록 깨우치는 민의의 대변자로 등장한다.

장준하의 정치평론에서 ‘법치(法治)’도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의 요소로서 자주 등장한다. 장준하는 법의 중요성을 그의 정치평론 곳곳에서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다”(장준하 1985q, 245), “법을 준수함에 춘일리빙(春日履氷)의 경건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애국심의 극치에 도달할 것입니다”(장준하 1985r, 173), “올바른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장준하 1985s, 109) 등 장준하는 법치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임을 분명히 강조했다.

그런데 장준하가 강조하는 법치도 민권이나 민의와 마찬가지로 이분법적 구조를 갖고 있다. 즉, 법이라고 해서 모두 존중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장준하의 법은 민의와 민권을 반영하는 민주적 법과 특권계급의 이해를 반영하는 반민주적 법으로 나뉘며, 민주적 법은 존중하고 준수해야만 하지만 반민주적 법은 개정하고 폐지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이 점에서 장준하는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실증주의자의 입장과 결별하고 보통법의 관점에 선다.⁷⁾

장준하(1985s, 106)는 미국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소로우(Henry David Thoreau)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통법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실정법과 정의가 깊이 대립되기 때문에 법의 위반이 곧 정의의 방위처럼 보일 수 있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법질서를 확립하려고 국민에게 외치기 전에 그 법질서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를 구현시키고 있는가를 언제나 재검토하는 겸허한 마음씨를 민주사회의 공복된 자는 가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민의에 토대를 둔 법을 강조하는 장준하의 법치는 리프만과 매우 유사하다. 리프만은 보통법적 관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고귀한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그 목적이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의 실질적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리프만(1965f, 329)의 주장은 법의 실질적 기초로서 민의를 강조하는 장준하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러나 리프만의 보통법 이론에서는 장준하와 같은 이분법적인 요소를 찾을 수

7) 필자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고 말했다는 법실증주의적 해석에 반대하며, 이와 같은 법해석은 소크라테스가 비판했던 소피스트의 관점으로 비판한다. 김대영 2003a, 32~33 참조.

없다. 민의와 상충하는 법은 민의에 따라 바꾸면 된다는 것이 리프만의 논리이다. 반면에 장준하는 민의를 억압하는 특권계급이 민의와 상충하는 법을 만들어 집행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법 자체를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장준하(1985f, 184)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자유는 최고도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법의 그늘에 숨어 사리를 도모하거나 혹은 권병(權柄)을 잡은 자”를 비판한다. 그는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언론을 탄압하는 상황에서 “국민은 그야말로 자기가 무슨 법체제하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음을 토로한다(장준하 1985s, 108~109).

장준하의 민주주의를 민권, 민의, 법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이분법적 요소를 살펴봐왔는데, 필자는 이와 같은 이분법의 전형을 파농(Franz Fanon)에게서 찾을 수 있었다. 파농(1963, 51)은 식민지 알제리아를 식민자(colonizer)와 식민지인(colonized)으로 나누어진 이분법의 세계로 인식하여 이를 선악이분법의 “움직임 없는 마니교적 세계(motionless Manichian world), 조각상의 세계(world of statues)”로 규정했다. 식민지의 독립을 거부하는 식민자와 독립을 요구하는 식민지인의 이해관계는 조화가 불가능한 상호배타적인 것이다. 식민자와 식민지인 사이에는 오직 승패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농의 이분법은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진영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 장준하의 정치평론이 독재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고 독재의 현실 속에서 살았던 장준하의 민주주의 사상이 이분법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조화가 불가능한 이해관계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어 싸우는 전쟁터에서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듯이, 독재에 항거해서 투쟁했던 장준하에게 이분법적 흑백논리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의 신념과 사상 자체를 버리라는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필요로 한다.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형성된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벗고 공론을 통해 민의를 제도 안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민주주의적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 이전에 진행되었던 시민사회의 비제도적 정치활동을 ‘운동정치

(movement politics)'로 개념화한 조희연·정태석(2001, 21) 교수의 문제의식은 높
이 평가할만하다.⁸⁾ 오늘의 한국정치는 제도권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더불어 과거
식의 운동정치적 관점에서 탈피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공론정치적 관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V. 맺음말

정치평론가에게서 일관된 정치사상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정치평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의 대상이 있고, 논쟁의 과정에서 정치평론가의 견해는 수
정되기 마련이다.⁹⁾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치현실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정치평론가에게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치사상을 찾는 일은, 매순간 즉각적으
로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하는 정치인에게 하나의 일관된 척도를 요구하는 것만큼
이나 무모한 일이다.

정치인은 계속해서 말을 바꿀 수밖에 없다. 괴슬러(Arthur Koestler, 1946, 5)에
따르면, 정치의 세계에는 '회전의 이율배반(Antinomy of Serpentine)'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인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으로 대중에게 변화된 방향
을 제시해야만 한다. 회전의 이율배반은 등산에 비유할 수가 있다. 정치적 목표는
가파른 정상 위에 있으며, 그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목표지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정치
인과 그저 막연하게 정치인을 추종하는 대중간의 괴리이다. 정치지도자를 따라가
는 대중의 입장에서는 정상은 보이지 않고 항상 정치인이 지시하는 변화하는 방향

8) 필자는 조희연·정태석의 문제의식과 '운동정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시
민사회의 정치활동을 운동정치만으로 이해하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제
도정치 중심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다 보니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사회의 정치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문제점을 노정했다. 시민사회의 정치활동으로
운동정치와 더불어 공론정치가 함께 강조될 필요가 있다.

9) 정치평론이 논쟁 속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유일성(uniqeness)'과 '복수성(plurality)'이
라는 그 본원적 속성 때문이다. '유일성'과 '복수성'에 대해서는 김대영 2003b, 179-
190 참조.

만이 보일 따름이다. 이에 따라 현실정치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치인은 계속해서 식언을 일삼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마련이다.

정치평론가도 상황에 따라 의견을 달리 피력할 수밖에 없다. 정치평론가는 정치인처럼 변화하는 상황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자기 주장을 매순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정치평론가를 정치학자와 비교할 경우 정치평론가에게는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리프만의 정치사상을 연구한 스틸(Ronald Steel 1981, xvi)은 리프만에게서 일관성 있는 정치사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학창시절에는 사회주의에 경도되었다가 이후 정치적 행동주의로, 회의론(skepticism)으로, 금욕주의적인 초월(stoical detachment)로, 경제적 보수주의로, 냉전에 대한 비판론으로, 사회적 자유주의로, 말년에는 월남전과 관련해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는 리프만의 정치사상을 일관성 있는 이론체계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⁰⁾

정치평론가와 정치학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정치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 정치학자가 형상보다는 본질,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정치평론가는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세세한 정치현상을 중시한다. 이 때문에 오웰(George Orwell 1968, 234)은 정치평론가를 “당대의 역사(contemporary history)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정치평론가는 정치인이나 정치학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장준하를 정치평론가인 동시에 정치인이며 나아가 정치사상가로 접근했고, 그 결과 장준하의 민주주의 사상을 ‘한민족의 민주주의’, ‘세계 속의 민주주의’, ‘이분법의 민주주의’로 정리했다. 이렇게 장준하의 정치사상을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준하의 정치사상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장준하의 정치사상 내에서는 정치인과 정치평론가 및 정치사상가가 별

10) 스틸은 리프만의 저서를 통해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순발력 있는 진단 이외에 민주주의를 위한 특별한 사상적 기여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스틸(1981, 183)은 리프만의 명저 『공론(Public Opinion)』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고발”이라고 평가한 듀이(John Dewey)의 서평을 인용하는 동시에 리프만의 논리가 내적 모순을 안고 있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리프만)는 그때까지도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버릴 수 없는 신념과 자신의 암울한 결론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개의 위상을 갖지 않고 모두가 민족의 통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매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고, 이들 모두가 특권계급의 독재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자기희생의 투쟁대오에 함께 서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장준하의 민주주의 사상 안에서는 독재체제가 종식되기 이전까지 정치평론가를 정치인 및 정치사상가와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그는 정치평론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도 “나는 나의 언론의 광장을 국민이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 호소를 결심하였던 것”(장준하 1985v, 160)이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다.

비록 장준하 자신의 사상체계 내에서는 정치인과 정치평론가 및 정치사상가가 구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더라도, 장준하가 일관되게 ‘한민족의 민주주의’, ‘세계속의 민주주의’, ‘이분법의 민주주의’의 관점에 섰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장준하의 정치평론 중에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의 민주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도 있고, 외세를 무조건적으로 배격하는 주장도 보이며, 치자와 피치자의 극단적 대립을 지양하자는 주장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장준하의 정치평론을 통해 그의 민주주의 사상을 앞의 세 가지 방식으로 고찰한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 장준하의 정치평론이 주장하는 바를 좀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필자는 장준하의 정치사상이 그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변화된 정치 현실 속에서도 장준하와 같은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현실적 타당성 유무를 떠나 이런 현상은, 장준하의 정치평론이 한국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 강정인 외. 2002.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한국의 민주화, 민주주의의 한국화』. 책세상.
- 김대영. 2000. 「당파성과 개체성의 갈등: 오웰과 괴슬러의 정치평론」. 『역사와 사회』. 제3권 제25집.
- _____. 2002a. 「정치평론과 민주적 공론장: Koestler, Orwell, Lippmann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2b. 「장준하의 정치평론 연구(1): 장준하의 정치평론에 나타난 민족주의」. 『한국정치연구』. 제11집 제2호.
- _____. 2003a. 「법과 정치: 리프만의 정치평론에 나타나는 보통법적 관점」. 『한국정치학회보』. 37집 1호.
- _____. 2003b. 「인간의 본원적 속성과 정치평론」.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3권 제2호(통권 5호).
- 김홍우. 1999. 『현상학과 정치철학』. 문학과 지성사.
- 박정희. 1997. 『국가와 혁명과 나』. 지구촌.
- 이동수. 2001. 「함석헌과 정치평론」.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4호. 2001년 겨울호.
- 이정복. 1995. 『한국정치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준하. 1985a. 「경견연설문」(1967년 옥중 출마 유세원고).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b. 「민주정치의 확립을 위하여」(『사상계』 1958년 11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c. 「박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씨울의 소리』 1975년 1,2월 합병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d. 「민족주의자의 길」(『씨울의 소리』 1972년 9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e. 「현대화의 거점」(『사상계』 1955년 4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f. 「민주주의의 재확인」(『사상계』 1956년 5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g. 「민족의교의 나아갈 길」(『씨울의 소리』 1973년 11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h. 「머리숙이라 민권 앞에」(『사상계』 1967년 10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i. 「우리는 특권계급의 밤이 아니다」(『사상계』 1957년 6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j. 「또다시 우리의 향방을 천명하면서」(『사상계』 1960년 6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k. 「민족통일 전략의 현 단계」(미발표 강연 초안).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l. 「국토 방위와 정신 무장」(『사상계』 1968년 8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m. 「죽음에서 본 4·19」(『기독교 사상』 1972년 4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n.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다」(『사상계』 1958년 10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o. 「따뜻한 정치를 바란다」(『사상계』 1956년 6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p. 「민주 명백은 유지되었는가: 1956년을 보내면서」(『사상계』 1956년 12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q. 「행정수뇌들과 입법자들을 향하여」(『사상계』 1959년 6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r. 「애국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사상계』 1955년 11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s. 「법의 정신과 질서」(『사상계』 1965년 11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t. 「혁명상미성공」(『사상계』 1960년 8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u. 「위기에 대한 책임」(『사상계』 1965년 10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1권. 사상.
- _____. 1985v. 「어두워야 모여드는 청중」(『신동아』 1967년 7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장준하 문집』. 3권. 사상.
- 조희연·정태석. 2001. 「한국 민주주의 변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분석들」. 조희연

- 편.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최장집. 200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Fanon, Franz. 1963. tr. by Constance Farrington.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Grove Press, Inc.
- Koestler, Arthur. 1946. "The Yogi and the Commissar" (Horizon, June 1942). *The Yogi and the Commissar and Other Essay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Lippmann, Walter. 1965a. *Public Opinion*. New York: A Free Press Paperback, The Macmillan Company.
- _____. 1965b. "Education vs. Western Civilization" (The American Scholar, 1941). Rossiter, Clinton & James Lare, eds. *The Essential Lippmann*.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65c. "A Preface to Morals (1929), Chapter 9". Rossiter, Clinton & James Lare, eds. *The Essential Lippmann*.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65d. "Dictatorship and Democracy" ('Today and Tomorrow' February 5, 1943). Rossiter, Clinton & James Lare, eds. *The Essential Lippmann*.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65e. "How Liberty Is Lost" ('Today and Tomorrow' July 16, 1938). Rossiter, Clinton & James Lare, eds. *The Essential Lippmann*.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65f. "Lawlessness" ('Today and Tomorrow' December 5, 1933). Rossiter, Clinton & James Lare, eds. *The Essential Lippmann*.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65g. "Everybody's Business and Nobocly's" ('Today and Tomorrow', April 10, 1941). Rossiter, Clinton & James Lare, eds. *The Essential Lippmann*.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25. *The Phantom Public*.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 _____. 1955. *The Public Philosophy*. Boston &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 _____. 1970. Introduction and annotations by Arthur Schlesinger, Jr. *Early Writings*. New York: Liveright.
- Negri, Antonio · Hardt, Michael. 2002. 윤수종 역. 『제국』. 이학사.
- Orwell, George. 1968. "Arthur Koestler". Sonia Orwell and Ian Angus, eds. *The Collected Essays, Journalism and Letters of George Orwell*. Vol. III.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 _____. 1977. "Who Are the War Criminals?" (*Tribune*, 22 October 1943). Orwell, Sonia and Ian Angus, eds. *The Collected Essays, Journalism and Letters of George Orwell*. Vol II. New York: Penguin Books.
- Walzer. Michael. 1987. *Interpretation and Social Criticism*. Cambridge &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

The Political Critique of Chang Chun-Ha: Focused on the Democracy

Dae-Young Kim | Academy of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

This paper reviews the political critique of Chang Chun-Ha. It is the sequel to the paper “The Political Critique of Chang Chun-Ha: Focused on the Nationalism” which was printed in 2002. Rep. Chang Chun-Ha was a successful politician and political critique, though it is hard for a man to be a good politician and a good political critic at the same time. Michael Walzer argues that critical distance is needed between the political world and the political critic, and Walter Lippmann argues that the role of public man differs from the role of private man including political critic. I’d like to find out the reason why Chang Chun-Ha can be called a good politician and political critic.

This paper compares Chang Chun-Ha’s democracy with Walter Lippmann’s to examine his political thought and political life. His democracy can be formulated as ‘democracy of Korean nation,’ ‘democracy in the world,’ and ‘democracy in dichotomy’. His democracy is derived from his personal experience of authoritative politics. And I’d like to argue that Chang Chun-Ha’s method of political critique is suitable to the authoritative political culture and it reflects Korean political history.

Key Words: Chang Chun-Ha, political critique, political critic, democracy, Walter Lippmann